

尹정부 1년차, 대학(원)생(170개 대학, 총2,431명, 평균 23.52세) 법·정치·결혼, 생각들

① 저출산 추세 심각 ② 유전(권)무죄-여전 ③ 핵 보유하자-신중 ④ 민노총 간첩단 소탕하라 ⑤ 거대야당 입법 독주-반대

-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 잘하고 있다 9.96% <못하고 있다 59.94%>
 - 일본강제징용 대법원 배상확정판결에 대한 정부해법 - 반대한다 <71.33%>
- 저출산 심각 -- “자녀” 생각없다 71.25% <여성 82.26%, 남성 56.84%>
 - 저출산 심각 -- “결혼” 생각없다 59.07% <여성 70.42% 남성 44.09%>
-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 - 정당하다 <동의 67.96%, 부동의 29.29%>
 -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직을 내려 놓아야 <동의 50.88%, 부동의 45.78%>
- 다수당인 야당이 단독 입법강행 하는 것 - 바람직하지 않다 <72.56%>
 - 대통령의 ‘법안거부권 행사’ 는 다수의 횡포를 막는 제도이다 <63.97%>

- 우리 법원(사법)은 불공정한 편이다 <16.58%, 매우 불공정하다 4.28%>
 - 유권(전)무죄, 무권(전)유죄 현상은 여전하다고 본다 <78.90%>
-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교도소 생활할 수 있다 <49.32%, 2020년에는 44.62%>
 -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을(범죄할) 수 있다 <49.20%>
- 소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의 현재결정에 부동의 <41.59%>
 -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업무수행, 잘하고 있다 26.21% <보통 46.94%>
- 통일은 남한식 자유민주적 통일이여야 한다 <81.49%, 2020년에는 65.07%>
 - 통일은 북한식 사회주의적 통일이여야 한다 <0.66%, 2431명중 16명>
- 주한미군 철수하면 우리국방 걱정된다 80.17% <걱정안됨 19.29%>
 - “자유” 를 삭제하는 개헌만큼은 막아야 <91.57%, 2020년에는 82.60%>

1.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단체인 33년 전통의 법률소비자연맹/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총재 김대인)은 매년 법의 날(4.25)과 유권자의 날(5.10)을 기해 청년·대학생 법·정치의식을 조사해왔으

며, 금년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에 즈음해 법률소비자연맹의 대학생자원봉사자 242명을 통해 전국의 170여개 대학교 청년·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2,431명을 대상(응답자의 65%는 서울지역, **평균연령 23.52세**)으로 실시한 38개 항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pm 1.99\%P$ 〉

2. 주요항목별 응답현황 <<자세한 내용은 5쪽, 이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1) 법 준수 및 현안이슈 관련 의식

- 01) 소위 '법파라치' 로펌의 저작권 위반 내용증명 수령/목격 <<응답자의 **11.81%**>>
- 02) 유권무죄, 무권유죄 현상 여전하다 <<동의 **78.90%**, 부동의 **18.84%**>>
- 03) 국가·사회의 법준수 여부는 '지켜지고 있다' <<**70.88%** (매우포함), 안지켜짐 **28.67%** (매우포함)>>
- 04) '악법이라도 법개정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 <<동의 **62.73%**, 부동의 **37.15%**>>
- 05)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 <<동의 **49.20%**, 부동의 **50.68%**>>
- 06) '우리나라는 법을 지키면 오히려 잘 살기 어렵다' <<동의 **44.01%**, 부동의 **55.70%**>>
- 07)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다' <<동의 **49.32%**, 부동의 **50.51%**>>
- 08) 우리 법원(사법부)은 '불공정한 편이다'
<<**20.86%** (매우포함), **공정한 편 35.21%** (매우포함), **보통 43.03%**>>
- 09) 소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이념편향적 결정' <<**41.59%**, 현재의 존재의미를 알려주는 좋은 결정 **44.96%**>>
- 10) 민주노총 간첩단 연루사건 등 간첩단 수사에 대해, '충격적인 것으로 서둘러 소탕해야 한다' <<응답자의 **61.50%** / 반면 '공안정국을 만드는 것 같다' **26.57%**>>
- 11) 일본강제징용 대법원 배상확정판결에 대한 정부의 해법으로 제3자 변제방안에 대해 '반대한다' <<**71.33%**, 찬성한다 **21.18%**>>
- 12) 민주노총의 회계공개 거부에 대해서 '투명한 노동운동을 위해서라도 공개해야 한다' <<응답자의 **75.85%**, '노동운동의 자유를 위한 공개 거부다' **19.95%**>>

(2)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 의식

- 01)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당하다' <<동의 **67.96%** 부동의 **29.29%**>>
- 02) '이재명 대표 수사는 정치보복이다' <<동의 **47.43%**, 부동의 **49.90%**>>
- 03)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동의 **50.88%**, 부동의 **45.78%**>>
- 04)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정당했다' <<동의 **53.93%**, 부동의 **41.96%**>>
- 05)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서둘러 만나야 한다' <<동의 **46.32%**, 부동의 **50.43%**>>

(3) 통일·안보 관련 의식

- 01) 북한 통일의 형식 '남한식 자유민주적 통일이어야' <<응답자의 **81.49%**, '북한식 사회주의적 통일이어야' **0.66%**(총 2431명 중 16명 응답)>>
- 02) 헌법개정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헌법개정(개헌)은 안된다'
<<동의 **91.57%**, 부동의 **8.35%**>>
- 03)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국방은 걱정이 없을 것' <<동의 **19.29%**, 부동의 **80.17%**>>
- 04) '북한의 도발행동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동의 **71.99%**, 부동의 **27.81%**>>
- 05)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에 안보위협 느낀다' <<동의 **59.28%**, 부동의 **40.39%**>>
- 06) '북한 핵에 맞서서 핵무기를 보유(개발)해야' <<찬성 **49.20%**, 반대 **47.92%**>>

(4) 국회 현안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인식

- 01) 국회의원 수 증감에 대하여,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48.54%>>, 50명 이상 감축 <<34.97%>>, 반면 50명 이상 증원 <<11.93%>>
- 02)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는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응답자의 63.97%, 반면 거부권 폐지해야 한다는 29.62%>>
- 03) 다수당인 야당이 단독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72.56% (매우포함),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도 20.65%, 바람직하다 22.63% (매우포함)>>
- 04)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 '잘하고 있다' <<9.95%(매우잘함 2.76% 포함), 보통이다 29.00%, 못하고 있다 59.93% (매우포함)>>
- 05)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업무수행'에 '잘하고 있다' <<26.21%(매우잘함 9.34% 포함), 보통 46.94%, 못함 24.06% (매우포함)>>
- 06) '양곡관리법(남은 쌀 강제 매수법)' <<찬성 37.43%, 반대 53.76%>>

(5)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구체적 성별 비교 15쪽~17쪽)

- 01) 결혼은 해야 한다 <<동의 40.64%, 부동의 59.07%, 여: 동의 29.58% 부동의 70.42%>>
- 02) 자녀는 낳아야 한다 <<동의 28.47%, 부동의 71.25%, 여: 동의 17.74%, 부동의 82.26%>>
- 03) '결혼을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수다' <<동의 81.74%, 남: 82.83%, 여: 81.46%>>
- 04) '정부가 결혼·출산장려에 예산만 많이 지원하면 결혼과 출산이 늘 것이다' <<동의 32.50%, 부동의 67.26%, 남 부동의 62.79%, 여 부동의 70.78%>>
- 05) '출산이 저조한 이유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아 졌기 때문이다' <<동의 36.53%, 부동의 63.14%, 남 부동의 62.37% 여 부동의 64.04% >>
- 06) 결혼을 결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한 질문에, 1위 응답은 '취업 등 경제적 자립' <<응답자의 67.67%(여 71.95%, 남 67.82%) / 2위 부모의 지원 등 자산 19.87%(여 19.25%, 남 22.01%) / 3위 대인관계능력 5.10%, 스펙 3.46% 순>>
- 07) 취업 뒤 어느 정도의 연봉을 벌게 되면 자유롭게 결혼 결심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7000만원 미만'이 41.09%(여 40.25%, 남 42.58%)로 가장 많고, 1억원 미만 19.62%, 1억원 이상 14.93%, 4천만원 미만 12.71%, 상관없다 11.27%>>

3. 이번 조사를 주관한 김대인 법률연맹 총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자 우리 헌법의 근본원리로서 국가(정부)의 존재이유” 라고 자유의 의미를 강조하고,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액튼경(Lord Acton)의 말이 시사하듯, 부정부패예방/척결과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은 권력견제라면서, 자유민주적 헌법이념과 실질적 법치가 실현되도록 주권시민들이 부정선거감시 등 주인노릇에 충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붙임 - 주요 항목 분석(5쪽) 및 항목별 응답현황 (18쪽)

이하 상세한 설문은 법률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goodlaw.org) 공지사항 참조 끝.

법률연맹 총본부 / 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

전화. 02) 523-8760~7, goodlaw@goodlaw.org <문의 : 홍금애 실장 / 윤소라 부장>

I. 조사배경 · 개요

1.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단체인 33년 전통의 **법률소비자연맹/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총재 **김대인**)은 매년 **법의 날(4.25)**과 **유권자의 날(5.10)**를 기해 대학생 법정치 의식조사를 해왔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에 즈음해 법률연맹의 대학생법정치봉사단원 242명이 170여개 대학교 대학(원)생 총 2,431명을 대상**(서울지역이 응답자의 65%, **평균연령 23.52세**)으로 2023년 4월 14일(금)부터 4월 25일(화)까지 12일 동안 **38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총 170여개 대학에 재학(휴학 등) 중이었고, 100명 이상 응답한 대학의 경우 **고려대학교<292명>**, **연세대학교<193명>**, **한국외국어대학교<176명>**, **성균관대학교<155명>**, **서울대학교<139명>**, **경희대학교<111명>** 순이다. **50명 이상 응답한 대학도** 중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서강대학교, 경북대학교 등이 있다.

응답자 분포는 **서울지역 대학재학(휴학 등)생이 65%이상(1,581명)**으로 가장 많고 **11개 해외대학** 재학 중인 학생들도 설문에 참여하였다.

2. 조사 개요

- 1) 조사기관 : 법률소비자연맹/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 (총재 김대인)
- 2) 조사방법 : 38개 문항의 설문으로 자원봉사대학생들(242명)에 의한 조사
- 3) 조사대상 : 남녀 청년 · 대학(원)생 **2,431명**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pm 1.99\%P$ 〉

가) 성별 응답자 현황

구 분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남 자	1033	42.49%
여 자	1390	57.18%
무응답	8	0.33%
계	2431	100%

나) 학력별 응답자 현황

구 분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재 학	1593	65.53%
휴 학	346	14.23%
졸 업	396	16.29%
대학원 재학	51	2.10%
기타/무응답	45	1.85%
계	2431	100%

다) 응답자 **평균연령 : 23.52세**

Ⅱ. 주요 응답 분석 |

1. 법 준수 및 현안이슈 관련 의식

- 1) 저작권법 비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 단서)와 관련하여 “로펌(Law-Firm) 등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 합의금을 지불하라(소위 법파라치 행태)’ 는 등의 내용증명이나 전화연락 등을 받은 적이 있거나, 친구나 아는 분 중에서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받아본 적이 있다’ 는 의견과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본 적이 있다’ 는 의견이 모두 11.81%가 나와서 응답자의 10명중 1명은 이러한 행태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작권법은 세계 표준인 친고죄를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친고죄로 졸속 개정하여 십수년째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서 매년 필수항목으로 조사 중임

《 소위 ‘법파라치’ 로펌의 저작권위반 내용증명 수령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본인이 직접 받아 본 적이 있다.	62	2.55%
☐ 2.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본 적이 있다.	225	9.26%
☐ 3. 직접 받은 적도, 주변에서도 본 적도 없다.	2127	87.49%
☐ 4. 기타	7	0.29%
☐ 0. 무응답	10	0.41%

- 2) 유권무죄, 무권유죄 현상과 관련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有權無罪 無權有罪 :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쓴다)라는 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78.90%로, 조사한 이후 처음으로 70%대로 낮아졌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8.84%였다.

참고로 지난해(2022년도)에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라는 말에 대해 ‘그런 현상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 는 의견이 86.69%(2021년도 86.91%, 2020년도 85.26%)로 높게 나온 바 있다.

《 ‘유권무죄 무권유죄 현상’ 에 대한 인식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유권무죄무권유죄‘현상이 있다는데 동의한다.	1918	78.90%
☐ 2. ‘유권무죄무권유죄’현상이 있다는데 동의하지않는다.	458	18.84%
☐ 3. 기타	48	1.97%
☐ 0. 무응답	7	0.29%

- 3) 우리 사회의 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는 의견이 61.17%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의견이 9.71%로 나와 시민들의 법 준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체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은 23.98%, ‘매우 잘 안 지켜지고 있다’는 의견은 4.69%였다.

《 국가·사회 법 준수 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236	9.71%
☐ 2.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	1487	61.17%
☐ 3. 대체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583	23.98%
☐ 4. 매우 잘 안 지켜지고 있다.	114	4.69%
☐ 5. 기타/무응답	11	0.45%

- 4) 악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풍조와 관련해 ‘악법이라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에 동의하는 의견이 62.73%(지난해 58.27%)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 37.15%(지난해 41.61%)보다 높게 나와서 악법이라도 개정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21년에는 ‘악법이라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66.35%(2020년도 66.92%)인 반면, 부동의하는 응답은 33.58%(2020년도 32.67%)이었다.

《 ‘악법이라도 법개정 전까지는 지켜야한다’ 동의 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525	62.73%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903	37.15%
☐ 3. 무응답	3	0.12%

- 5) 처벌여부에 따른 법 준수 태도 관련,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에 동의하는 의견이 49.20%(지난해 52.87%),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0.68%(지난해 46.92%)로 근소하게 엇갈렸다. 처벌여부가 법 준수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고로 2021년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에 동의하는 의견은 51.94%(2020년도 48.87%)였고, 부동의 하는 의견은 47.70%(2020년도 50.96%)였다.

《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 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196	49.20%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232	50.68%
☐ 3. 무응답	3	0.12%

- 6) 법 준수에 대한 피해의식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지키면 오히려 잘 살기 어렵다’ 에 동의하는 의견은 44.01%(지난해 44.12%)였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55.70%(55.80%)였다.

참고로 2021년에는 ‘우리 사회에서는 오히려 법을 지키면 잘 살기 어렵다’ 에 동의하는 의견은 48.13%(2020년도 46.35%)였고, 부동의를 51.65%(2020년도 50.99%)였다.

《 ‘법을 지키면 오히려 잘 살기 어렵다’ 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070	44.01%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354	55.70%
☐ 3. 무응답	7	0.29%

- 7)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다’ 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은 49.32%(지난해 47.84%)가 나와, 지난해보다 높아졌고 부동의한다는 50.51%였다. 참고로 2021년에는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다’ 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48.72%(2020년도 44.62%)였고, 부동의한다는 응답은 50.91%(2020년도 55.11%)였다.

《 ‘10억주면 1년 동안 교도소 생활’ 에의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199	49.32%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228	50.51%
☐ 3. 무응답	4	0.16%

- 8) 우리나라 법원(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 ‘법원(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공정한 편이다’ 는 의견은 29.62%(지난해 34.91%), ‘매우 공정하다’ 는 의견은 5.59%(지난해 4.94%)로 나타났다.

반면 ‘불공정한 편이다’ 는 의견은 16.58%(지난해 18.33%), ‘매우 불공정하다’ 는 의견은 4.28%(지난해 2.72%)로, 10명중에 2명은 사법부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법원(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매우 공정하다.	136	5.59%
☐ 2. 공정한 편이다.	720	29.62%
☐ 3. 보통이다.	1046	43.03%
☐ 4. 불공정한 편이다.	403	16.58%
☐ 5. 매우 불공정하다.	104	4.28%
☐ 6. 기타	15	0.62%
☐ 0. 무응답	7	0.29%

- 9) 소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존재의미를 알려 주는 좋은 결정’이라는 의견이 44.96%로 나왔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이념편향적 결정’이라는 의견도 41.59%로 높게 나와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조차 이제 ‘이념편향’을 우려하는 사회가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인식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헌법재판소의 존재의미를 알려 주는 좋은 결정이었다.	1093	44.96%
☐ 2.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이념편향적 결정이었다.	1011	41.59%
☐ 3. 기타	232	9.54%
☐ 0. 무응답	95	3.91%

- 10)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민주노총 간첩단 연루사건 등 간첩단 수사에 대해 ‘충격적인 것으로 서둘러 소탕해야 한다’는 의견이 61.50%로 높게 나온 반면, ‘공안정국을 만드는 것 같다’는 우려 의견은 26.57%에 불과했다.

《민주노총 간첩단 연루사건 등 ‘간첩단’ 수사에 대한 대한 인식》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충격적인 것으로 서둘러 소탕해야 한다.	1495	61.50%
☐ 2. 공안정국을 만드는 것 같다.	646	26.57%
☐ 3. 기타	185	7.61%
☐ 0. 무응답	105	4.32%

- 11) 일본 강제징용 대법원 배상확정판결에 대한 정부의 해법으로 제3자 변제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21.18%에 불과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이 71.33%로 높게 나왔다.

《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정부의 제3자 변제방안에 대한 인식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찬성한다.	515	21.18%
☐ 2. 반대한다.	1734	71.33%
☐ 3. 기타	125	5.14%
☐ 0. 무응답	57	2.34%

- 12) 민주노총의 회계 공개 거부에 대해서는 ‘노동운동의 자유를 위해 공개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19.95%인 반면, ‘투명한 노동운동을 위해서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75.8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 ‘민주노총의 회계공개’ 거부에 대한 인식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노동운동의 자유를 위해 공개 거부해야 한다.	485	19.95%
☐ 2. 투명한 노동운동을 위해서라도 공개해야 한다.	1844	75.85%
☐ 3. 기타	59	2.43%
☐ 0. 무응답	43	1.77%

- 13) ‘흙수저라도 노력하면 남들처럼 잘 살 수 있다’에 대해 50.88%는 동의하였지만, 48.7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흙수저라도 노력하면 남들처럼 잘 살 수 있다’에 대해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1237	50.88%
☐ 2.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1185	48.75%
☐ 0. 무응답	9	0.37%

2.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관련

- 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당하다’에 동의하는 의견은 67.96%(1652명 응답)인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9.29%(712명)로 30%대를 밑돌았다.

《 ‘이재명 대표 수사는 정당하다’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652	67.96%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712	29.29%
☐ 3. 무응답	67	2.76%

한편, ‘이재명 대표 수사는 정치보복이다’에 동의하는 의견도 47.43%로 높게 나왔으나, ‘수사가 정당하다’는 의견보다는 수치가 크게 낮았다.

《 ‘이재명 대표 수사는 정치보복이다’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153	47.43%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213	49.90%
☐ 3. 무응답	65	2.67%

- 2)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에 동의하는 의견은 50.88%(1237명)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5.78%(1113명)였으며, 무응답이 3.33%였다.

《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237	50.88%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113	45.78%
☐ 3. 무응답	81	3.33%

- 3)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2월 27일 체포동의안 부결은 정당했다’에 동의하는 의견은 53.93%로 국회의 절차를 존중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1.96%였다. 국회 절차에 대해 존중하지 않는 의견은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의견보다도 적게 나왔다.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정당했다’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311	53.93%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020	41.96%
☐ 3. 무응답	100	4.11%

- 4)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둘러 만나야 한다’에 동의하는 의견은 46.32%인 반면, 동의하지 않는 의견은 50.43%로 조금 높게 나와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조속한 회담’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126	46.32%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226	50.43%
☐ 3. 무응답	79	3.25%

3. 통일 · 안보 관련 의식

- 1) ‘만약 남북이 통일된다면 어떤 통일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남북한 통일의 적합한 방식에 대해, ‘남한식 자유민주적 통일’이라는 의견이 81.49%(지난해 83.30%)로 높게 나와 청년대학생들이 우리나라 체제에 대한 우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식 사회주의적 통일’은 0.66%(16명 응답)였고, ‘남북한 대등한 입장에서의 통일’은 16.00%였다.

기타의견으로는 ‘통일은 필요 없다’, ‘통일은 안 된다’는 등 통일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고로 2021년에는 ‘남한식 자유민주적 통일’이 79.74%(1090명)였고, ‘남북한 대등한 입장에서의 통일’이 17.62%(239명)였다.

《 남북한 통일의 경우 적합한 통일의 방식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남한식 자유민주적 통일	1981	81.49%
☐ 2. 북한식 사회주의적 통일	16	0.66%
☐ 3. 남북한 대등한 입장(사실상 불가능?)에서의 통일	389	16.00%
☐ 4. 기타	34	1.40%
☐ 0. 무응답	11	0.45%

- 2) 헌법개정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헌법개정은 안 된다’는 의견은 91.57%(지난해 92.30%)로 여전히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였고,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8.35%(지난해 7.49%)에 불과하였다.

2021년도에도 ‘자유를 삭제하는 헌법개정(개헌)은 해서는 안 된다’에 동의하는 의견이 90.40%(1237명)으로 ‘부동의한다’는 의견(9.51%)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즉, 3년 연속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 ‘자유’ 삭제 헌법 개정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2226	91.57%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203	8.35%
☐ 3. 무응답	2	0.08%

- 3)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우리 국방은 걱정이 없을 것이다’에 동의하는 의견은 19.29%(지난해 21.05%)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80.17%(지난해 78.69%)로 매우 높게 나와, 청년 대학생들은 주한미군

의 주둔이 여전히 우리 안보와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21년에는 ‘주한미군 철수해도 우리 국방은 걱정이 없을 것이다’에 동의하는 의견은 19.09%(2020년도 24.77%)인 반면, 부동의하는 의견이 80.69%(2020년도 74.77%)로 높았다.

《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우리 국방에 걱정이 없다’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469	19.29%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949	80.17%
☐ 3. 무응답	13	0.53%

- 4) ‘북한의 도발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에 동의하는 의견은 71.99%로 매우 높게 나왔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7.81%로 청년 대학생들은 강력한 대북정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750	71.99%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676	27.81%
☐ 3. 무응답	5	0.21%

- 5)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에 안보위협을 느낀다’에 동의하는 의견은 59.28%(지난해 58.31%)로 높게 나왔다. 그러나 무려 40.3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북한미사일 등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지난해에 이어 많이 느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위협’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1441	59.28%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982	40.39%
☐ 3. 무응답	8	0.33%

- 6) ‘북한 핵에 맞서서 핵무기를 보유(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49.20%였고, ‘반대한다’는 의견이 47.92%로 엇갈렸다.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시험에 위협을 느끼면서 핵무기 보유 내지 개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평가됐다.

《 ‘북한 핵에 맞선 핵 개발(보유)’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찬성한다.	1196	49.20%
☐ 2. 반대한다.	1165	47.92%
☐ 3. 기타	55	2.26%
☐ 0. 무응답	15	0.62%

4. 국회 현안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인식

- 1) ‘국회의원 수 증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8.54%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50명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34.97%여서, 국회의원수를 감축하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를 점했다.

반면에 ‘50명 이상 증원해도 된다’는 의견은 11.93%에 불과했다.

《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 증감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1180	48.54%
☐ 2. 50명 정도 증원해도 된다.	290	11.93%
☐ 3. 50명 이상 감축해야 한다.	850	34.97%
☐ 4. 기타	82	3.37%
☐ 0. 무응답	29	1.19%

- 2) 대통령의 ‘법안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 63.97%로 높게 나왔으며, ‘바람직하지 않아 폐지해야 하는 제도’라는 의견은 29.62%로 30%에도 못 미쳐, 청년대학생들의 경우 대통령의 법안거부권 행사의 존재의미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타 의견으로 ‘제도의 의미는 있지만 남용은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 ‘대통령의 법안거부권 행사’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1555	63.97%
☐ 2. 바람직하지 않아 폐지해야 하는 제도이다.	720	29.62%
☐ 3. 기타	102	4.20%
☐ 0. 무응답	54	2.22%

- 3) 여소야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야당이 단독 입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51.91%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20.65%로 나타나, 법안처리가 가능한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반면,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4.28%,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18.35%에 불과했다. 기타의 견으로 ‘민주적인 결과이지만 다수당의 횡포는 안 된다’도 있었다.

《 다수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매우 바람직하다.	104	4.28%
☐ 2. 바람직하다.	446	18.35%
☐ 3. 바람직하지 않다.	1262	51.91%
☐ 4.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502	20.65%
☐ 5. 기타	76	3.13%
☐ 0. 무응답	41	1.69%

- 4)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2.76%, ‘잘하고 있는 편이다’는 7.20%로 긍정적인 평가는 10%정도에 불과했다.

반면, ‘못하고 있다’는 31.84%, ‘매우 못하고 있다’는 28.10%로 부정적인 평가가 50%를 넘겼다 ‘보통이다’라는 중립적 의견은 29.00%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언론에 표출되고 있는 대일외교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매우 잘하고 있다.	67	2.76%
☐ 2. 잘하고 있는 편이다.	175	7.20%
☐ 3. 보통이다.	705	29.00%
☐ 4. 못하고 있다.	774	31.84%
☐ 5. 매우 못하고 있다.	683	28.10%
☐ 0. 무응답	27	1.11%

- 5) 많이 회자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인사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46.94%(1141명 응답)로 가장 많아 호불호를 나타내지 않았다.

‘매우 잘하고 있다’(9.34%)와 ‘잘하고 있는 편이다’(16.97%) 등 긍정적 평가와 ‘매우 못하고 있다’(8.89%)와 ‘못하고 있다’(15.18%) 등 부정적인 평가는 엇비슷하게 갈렸으나, 긍정적 평가가 조금 우세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업무수행’ 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매우 잘하고 있다.	227	9.34%
☐ 2. 잘하고 있는 편이다.	410	16.87%
☐ 3. 보통이다.	1141	46.94%
☐ 4. 못하고 있다.	369	15.18%
☐ 5. 매우 못하고 있다.	216	8.89%
☐ 0. 무응답	68	2.80%

- 6) ‘양곡관리법(남은 쌀 강제 매수법)’ 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는 의견은 37.43% 인 반면, ‘반대한다’ 는 의견은 53.76%로 높게 나타나, 반대하는 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법안의 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 는 의견이 많았는데, 청년 대학생들조차 국회에서 처리되는 쟁점법안에 대해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회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 ‘양곡관리법(남은 쌀 강제매수법)’ 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찬성한다.	910	37.43%
☐ 2. 반대한다.	1307	53.76%
☐ 3. 기타	125	5.14%
☐ 0. 무응답	89	3.66%

5.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의식

- 1)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결혼은 해야 한다’ 에 ‘동의한다’ 는 입장은 40.64%로 10명중에 4명에 불과했다. ‘동의하지 않는다’ 는 의견은 59.07%였다.

‘동의하지 않는다’ 의 경우 여자응답자의 경우에는 70.42%로, 남자응답자의 44.0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결혼은 해야 한다’ 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비율)	남자응답자	여자응답자
☐ 1. 예(동의한다)	988 (40.64%)	577 (58.40%)	410 (41.50%)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436 (59.07%)	455 (31.69%)	976 (67.97%)
☐ 3. 무응답	7 (0.29%)		

응답항목	남성응답자 (1032명)	여성응답자 (1386명)
☐ 1. 예(동의한다)	577 (55.91%)	410 (29.58%)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455 (44.09%)	976 (70.42%)

- 2) ‘자녀는 낳아야 한다’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은 더 떨어져서 28.47%로 10명중에 3명에 불과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71.25%나 되었다. 여자 응답자의 경우 무려 82.26%가 출산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답변하였고, 남성의 경우에는 56.84%가 ‘자녀는 낳아야 한다’는 동의하지 않았다.

《 ‘자녀는 낳아야 한다’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비율)	남자응답자	여자응답자
☐ 1. 예(동의한다)	692 (28.47%)	445 (64.31%)	246 (35.55%)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732 (71.25%)	586 (33.83%)	1141 (65.88%)
☐ 3. 무응답	7 (0.29%)		

응답항목	남성응답자 (1031명)	여성응답자 (1387명)
☐ 1. 예(동의한다)	445 (43.16%)	246 (17.74%)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586 (56.84%)	1141 (82.26%)

- 3) ‘결혼을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수다’는 것에 대해서는 81.74%가 동의한다고 하여, 경제적 독립이 결혼의 선결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의하는 의견은 17.98%에 불과했다.

여성과 남성 모두 ‘경제적 독립이 필수’라는데 동의하는 경우가 남성 82.83%, 여성 81.46%로 80%대를 넘었다.

《 ‘결혼을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수다’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비율)	남자응답자	여자응답자
☐ 1. 예(동의한다)	1987 (81.74%)	854 (42.98%)	1129 (56.82%)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437 (17.98%)	177 (40.50%)	257 (58.81%)
☐ 3. 무응답	7 (0.29%)		

응답항목	남성응답자 (1031명)	여성응답자 (1386명)
☐ 1. 예(동의한다)	854 (82.83%)	1129 (81.46%)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77 (17.17%)	257 (18.54%)

- 4) ‘정부가 예산만 많이 지원하면 결혼과 출산이 늘 것이다’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은 32.50%로 나타나,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결혼 및 출산율 저조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의하는 의견이 67.26%였다. 여자응답자의 경우 70.78%로 남자응답자의 62.79%보다 부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정부가 예산만 많이 지원하면 결혼과 출산은 늘 것이다’에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비율)	남자응답자	여자응답자
☐ 1. 예(동의한다)	790 (32.50%)	384 (48.61%)	405 (51.27%)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635 (67.26%)	648 (39.63%)	981 (60.00%)
☐ 3. 무응답	6 (0.25%)		

응답항목	남성응답자 (1032명)	여성응답자 (1386명)
☐ 1. 예(동의한다)	384 (37.21%)	405 (29.22%)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648 (62.79%)	981 (70.78%)

- 5) ‘출산이 저조한 이유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아 졌기 때문이다’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은 36.53%(888명)로 부동의하는 의견(63.14%)보다 적게 나왔으나, 여성의 사회활동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여성의 사회활동과 육아환경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이것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비슷했다. 여성의 경우에는 35.96%가 동의를 하였고, 남성의 경우에는 37.63%가 동의를 하였다.

《 ‘출산저조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비율)	남자응답자	여자응답자
☐ 1. 예(동의한다)	888 (36.53%)	388 (43.69%)	498 (56.08%)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535 (63.14%)	643 (41.89%)	887 (57.79%)
☐ 3. 무응답	8 (0.33%)		

응답항목	남성응답자 (1032명)	여성응답자 (1386명)
☐ 1. 예(동의한다)	388 (37.63%)	498 (35.96%)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643 (62.37%)	887 (64.04%)

- 6) 결혼을 결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해서는 ‘취업 등 경제적 자립’이 67.67%로 가장 높게 나와 정부가 결혼대책을 마련하려면 먼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부모의 지원 등 자산이 19.87%로 경제적 문제가 결혼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애정’ ‘사랑’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많지는 않았다. 여성 응답자나 남성 응답자의 응답 순위는 같았으나 응답비율에 약간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 결혼을 결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해서는 ‘취업 등 경제적 자립’이 여성 71.95%, 남성 67.82%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의 지원 등 자산이 여성 19.25%, 남성 22.01%로 경제적 문제가 결혼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혼결심을 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한 인식 》

응답항목	응답인원(비율)	남자응답자	여자응답자
☐ 1. 취업 등 경제적 자립	1645 (67.67%)	687 (41.76%)	957 (58.18%)
☐ 2. 부모의 지원 등 자산	483 (19.87%)	223 (46.17%)	256 (53.00%)
☐ 3. 대인관계 능력	124 (5.10%)	63 (50.81%)	61 (49.19%)
☐ 4. 학력, 자격증 등 스펙	84 (3.46%)	34 (40.48%)	49 (58.33%)
☐ 5. 출신지역	13 (0.53%)	6 (46.15%)	7 (53.85%)
☐ 6. 기타	63 (2.59%)		
☐ 0. 무응답	19 (0.78%)		

응답항목	남성응답자 (1013명)	여성응답자 (1330명)
☐ 1. 취업 등 경제적 자립	687 (67.82%)	957 (71.95%)
☐ 2. 부모의 지원 등 자산	223 (22.01%)	256 (19.25%)
☐ 3. 대인관계 능력	63 (6.22%)	61 (4.59%)
☐ 4. 학력, 자격증 등 스펙	34 (3.36%)	49 (3.68%)
☐ 5. 출신지역	6 (0.59%)	7 (0.53%)

7) 취업 뒤 어느 정도의 연봉을 벌게 되면 자유롭게 결혼 결심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7000만원 미만’ 이 41.09%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1억원 미만이 19.62%, 1억원 이상이 14.93%, 4000만원 미만이 12.71% 순이었다. ‘상관없다’ 는 의견은 11.27%에 불과했다.

2021년 기준 30인 미만 중소기업 초임 평균연봉은 2772만원인 것을 감안하며 대부분 중소기업 취업자들은 결혼을 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취업 뒤 어느 정도의 연봉을 벌게 되면 자유롭게 결혼 결심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7000만원 미만’ 이 40.25%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1억원 미만이 21.39%, 1억원 이상이 15.10%, 4000만원 미만이 13.01% 순이었다. ‘상관없다’ 는 의견은 10.26%에 불과했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취업 뒤 어느 정도의 연봉을 벌게 되면 자유롭게 결혼 결심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7000만원 미만’ 이 42.58%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1억원 미만이 17.46%, 1억원 이상이 14.94%, 4000만원 미만이 12.51% 순이었다. ‘상관없다’ 는 의견은 12.51%에 불과했다.

《 ‘결혼결심하는 데 필요한 연봉’ 에 대한 인식 》

응답항목	응답인원(비율)	남자응답자	여자응답자
☐ 1. 상관없다	274 (11.27%)	129 (47.08%)	142 (51.82%)
☐ 2. 4000만원 미만	309 (12.71%)	129 (41.75%)	180 (58.25%)
☐ 3. 7000만원 미만	999 (41.09%)	439 (43.94%)	557 (55.76%)
☐ 4. 1억원 미만	477 (19.62%)	180 (37.74%)	296 (62.05%)
☐ 5. 1억원 이상	363 (14.93%)	154 (42.42%)	209 (57.58%)
☐ 0. 무응답	9 (0.37%)		

응답항목	남성응답자 (1031명)	여성응답자 (1384명)
☐ 1. 상관없다	129 (12.51%)	142 (10.26%)
☐ 2. 4000만원 미만	129 (12.51%)	180 (13.01%)
☐ 3. 7000만원 미만	439 (42.58%)	557 (40.25%)
☐ 4. 1억원 미만	180 (17.46%)	296 (21.39%)
☐ 5. 1억원 이상	154 (14.94%)	209 (15.10%)

Ⅲ. 항목별 응답 현황 |

01. 귀하는 우리 국가·사회가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236	9.71%
☐ 2.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	1487	61.17%
☐ 3. 대체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583	23.98%
☐ 4. 매우 잘 안 지켜지고 있다.	114	4.69%
☐ 5. 기타	3	0.12%
☐ 0. 무응답	8	0.33%

02. 귀하는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有權無罪 無權有罪 :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동의한다	1918	78.90%
☐ 2. 동의하지 않는다	458	18.84%
☐ 3. 기타	48	1.97%
☐ 0. 무응답	7	0.29%

03. 귀하는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예, 동의하지 않으면 아니오에 응답>

1) 북한의 도발행동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해야 한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750	71.99%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676	27.81%
☐ 3. 무응답	5	0.21%

2)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에 안보위협을 느낀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441	59.28%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982	40.39%
☐ 3. 무응답	8	0.33%

3)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우리국방은 걱정없을 것이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469	19.29%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949	80.17%
☐ 3. 무응답	13	0.53%

04. 귀하는 만약 남북이 통일된다면 어떤 통일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남한식 자유민주적 통일	1981	81.49%
☐ 2. 북한식 사회주의적 통일	16	0.66%
☐ 3. 남북한 대등한 입장(사실상 불가능?)에서의 통일	389	16.00%
☐ 4. 기타	34	1.40%
☐ 0. 무응답	11	0.45%

05.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예, 동의하지 않으면 아니오에 응답〉

1) ‘자유’ 를 삭제하는 헌법개정(개헌)을 해서는 안된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2226	91.57%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203	8.35%
☐ 3. 무응답	2	0.08%

2) 악법이라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525	62.73%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903	37.15%
☐ 3. 무응답	3	0.12%

3)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196	49.20%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232	50.68%
☐ 3. 무응답	3	0.12%

4)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지키면 오히려 잘 살기 어렵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070	44.01%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354	55.70%
☐ 3. 무응답	7	0.29%

5)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교도소생활을 할 수 있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199	49.32%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228	50.51%
☐ 3. 무응답	4	0.16%

6) 흡수저라도 노력하면, 남들처럼 잘 살 수 있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237	50.88%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185	48.75%
☐ 3. 무응답	9	0.37%

06. 귀하는 법원(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매우 공정하다.	136	5.59%
☐ 2. 공정한 편이다.	720	29.62%
☐ 3. 보통이다.	1046	43.03%
☐ 4. 불공정한 편이다.	403	16.58%
☐ 5. 매우 불공정하다.	104	4.28%
☐ 6. 기타	15	0.62%
☐ 0. 무응답	7	0.29%

07. 귀하는 소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헌법재판소의 존재의미를 알려 주는 좋은 결정이었다.	1093	44.96%
☐ 2.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이념편향적 결정이었다.	1011	41.59%
☐ 3. 기타	232	9.54%
☐ 0. 무응답	95	3.91%

08. 귀하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다음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예, 동의하지 않으면 아니오에 응답>

1)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당하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652	67.96%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712	29.29%
☐ 3. 무응답	67	2.76%

2) 이재명대표 수사는 정치 보복이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153	47.43%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213	49.90%
☐ 3. 무응답	65	2.67%

3)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237	50.88%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113	45.78%
☐ 3. 무응답	81	3.33%

4)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2월 27일 체포동의안 부결은 정당했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311	53.93%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020	41.96%
☐ 3. 무응답	100	4.11%

5)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둘러 만나야 한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126	46.32%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226	50.43%
☐ 3. 무응답	79	3.25%

09. 귀하는 소위 ‘대장동 50억클럽’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늦었지만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	1394	57.34%
☐ 2.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893	36.73%
☐ 3. 기타	86	3.54%
☐ 0. 무응답	415	17.07%

10. 귀하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 요소가 되고 있는 민주노총 간첩단 연루사건 등 간첩단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충격적인 것으로 서둘러 소탕해야 한다.	1495	61.50%
☐ 2. 공안정국을 만드는 것 같다.	646	26.57%
☐ 3. 기타	185	7.61%
☐ 0. 무응답	105	4.32%

11. 귀하는 로펌(Law-Firm) 등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 합의금을 지불하라는 등의 내용증명이나 전화연락 등을 받은 적이 있거나, 친구나 아는 분 중에서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있었습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본인이 직접 받아 본 적이 있다.	62	2.55%
☐ 2.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본 적이 있다.	225	9.26%
☐ 3. 직접 받은 적도, 주변에서도 본 적도 없다.	2127	87.49%
☐ 4. 기타	7	0.29%
☐ 0. 무응답	10	0.41%

12. 귀하는 일본강제징용 대법원 배상확정판결에 대한 정부의 해법(제3자 변제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찬성한다.	515	21.18%
☐ 2. 반대한다.	1734	71.33%
☐ 3. 기타	125	5.14%
☐ 0. 무응답	57	2.34%

13. 귀하는 국회의원수 증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1180	48.54%
☐ 2. 50명 정도 증원해도 된다.	290	11.93%
☐ 3. 50명 이상 감축해야 한다.	850	34.97%
☐ 4. 기타	82	3.37%
☐ 0. 무응답	29	1.19%

14. 귀하는 민주노총의 회계공개 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노동운동의 자유를 위해 공개 거부해야 한다.	485	19.95%
☐ 2. 투명한 노동운동을 위해서라도 공개해야 한다.	1844	75.85%
☐ 3. 기타	59	2.43%
☐ 0. 무응답	43	1.77%

15. 귀하는 북한 핵에 맞서서 핵무기를 보유(개발)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찬성한다.	1196	49.20%
☐ 2. 반대한다.	1165	47.92%
☐ 3. 기타	55	2.26%
☐ 0. 무응답	15	0.62%

16. 귀하는 대통령의 ‘법안거부권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1555	63.97%
☐ 2. 바람직하지 않아 폐지해야 하는 제도이다.	720	29.62%
☐ 3. 기타	102	4.20%
☐ 0. 무응답	54	2.22%

17. 귀하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야당이 단독 입법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매우 바람직하다.	104	4.28%
☐ 2. 바람직하다.	446	18.35%
☐ 3. 바람직하지 않다.	1262	51.91%
☐ 4.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502	20.65%
☐ 5. 기타	76	3.13%
☐ 0. 무응답	41	1.69%

18. 귀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매우 잘하고 있다.	67	2.76%
☐ 2. 잘하고 있는 편이다.	175	7.20%
☐ 3. 보통이다.	705	29.00%
☐ 4. 못하고 있다.	774	31.84%
☐ 5. 매우 못하고 있다.	683	28.10%
☐ 0. 무응답	27	1.11%

19. 귀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업무수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매우 잘하고 있다.	227	9.34%
☐ 2. 잘하고 있는 편이다.	410	16.87%
☐ 3. 보통이다.	1141	46.94%
☐ 4. 못하고 있다.	369	15.18%
☐ 5. 매우 못하고 있다.	216	8.89%
☐ 0. 무응답	68	2.80%

20. 귀하는 양곡관리법(남는 쌀 강제매수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찬성한다.	910	37.43%
☐ 2. 반대한다.	1307	53.76%
☐ 3. 기타	125	5.14%
☐ 0. 무응답	89	3.66%

《가정의 달 인구소멸위기 특집》

21.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예, 동의하지 않으면 아니오에 응답〉

1) 결혼은 해야 한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988	40.64%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436	59.07%
☐ 3. 무응답	7	0.29%

2) 자녀는 낳아야 한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692	28.47%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732	71.25%
☐ 3. 무응답	7	0.29%

3) 결혼을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수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987	81.74%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437	17.98%
☐ 3. 무응답	7	0.29%

4) 정부가 예산만 많이 지원하면 결혼과 출산이 늘 것이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790	32.50%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635	67.26%
☐ 3. 무응답	6	0.25%

5) 출산이 저조한 이유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888	36.53%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535	63.14%
☐ 3. 무응답	8	0.33%

22.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결혼을 결심하는 데 다음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항 한 개만 선택>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취업 등 경제적 자립	1645	67.67%
☐ 2. 부모의 지원 등 자산	483	19.87%
☐ 3. 대인관계 능력	124	5.10%
☐ 4. 학력, 자격증 등 스펙	84	3.46%
☐ 5. 출신지역	13	0.53%
☐ 6. 기타	63	2.59%
☐ 0. 무응답	19	0.78%

23.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취업 뒤 어느 정도의 연봉을 벌게 되면 자유롭게 결혼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2021년 기준 30인 미만 중소기업 초임 평균은 2772만원, 36개 공기업 초임 평균은 3892만원입니다.(인쿠르트, 잡코리아 조사)>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상관없다	274	11.27%
☐ 2. 4000만원 미만	309	12.71%
☐ 3. 7000만원 미만	999	41.09%
☐ 4. 1억원 미만	477	19.62%
☐ 5. 1억원 이상	363	14.93%
☐ 0. 무응답	9	0.37%